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2010

Trends and Socio-Economic Factors Impacting on Married Couples' Childlessness Among Korean Provinces : 1990~2010

김한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Han-Gon Kim(hgkim@yu.ac.kr)

요약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무자녀율의 변화 추이와 그러한 무자녀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무자녀율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자녀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는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및 경제발전 등의 요인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무자녀율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로 일반기혼여성 무자녀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군별 무자녀율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무자녀율을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난임 부부의 임신을 위한 지원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지발적 무자녀 현상이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의 연령층에 걸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난임 부부의 임신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자발적 무자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산에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인식전환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중심어 : | 일반기혼여성무자녀율 | 연령군별무자녀율 | 사회발전 | 여성의 지위 | 난임부부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childlessness trends and examine the factors impacting on the childlessness of married couples among Korean provinces between 1990 and 20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have been differences in childlessness rates among provinces and over time as well. Furthermore, social development, transportation, women's status, and economic developme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ASMCRR. It turns out that age-specific marital childlessness rate is rather accurate measurement than general marital childlessness rate in terms of 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childlessness among Korean provinces. Korea's government policy to aid the married couples who are suffering from in-fecundity is strongly recommended to maintain its policy and extend its subjects in order to increase married couples' fertility rate. Furthermore, campaigns to change married couples' recognition and attitudes from unfavorable against childbearing to favorable toward childbearing so that the married couples would be willing to have childbearing in terms of fertility rate increase.

■ keyword : | General Marital Childlessness Rate | Age-specific Fertility Rate | Social Development | Women's Status | Married Couples Suffering from in-fecundity |

* 본 연구는 2013년도 영남대학교 교비 연구지원(과제번호: 2013001448)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혀둡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8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17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17일

교신저자 : 김한곤, e-mail : hgkim@yu.ac.kr

I. 들어가는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 2.1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초저출산 수준의 1.3에 도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 후 출산율은 미미한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2013년에 합계출산율 1.19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는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1-3].

래리돈(Leridon, 1982)에 따르면 무자녀 현상은 출산율의 최소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무자녀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출산율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무자녀 현상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시작된 시기는 197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4-9]. 기혼 여성들의 무자녀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비자발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주로 자발적인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초혼연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11][12]. 그 결과,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신 및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난임 부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속하며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2]. 한편, 지원 혜택으로는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하며 체외 수정 시술비의 경우 신신배아이식은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12].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혼과 자녀출산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고 선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14]. 뿐만 아니라, 만혼과 출산 연기 등이 결과적으로

로 무자녀로 귀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적인 측면에서 무자녀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자녀 현상은 상이한 문화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와 같은 무자녀 현상은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자녀 현상의 변화 추세 및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주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의 무자녀 현상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 연구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경험한 무자녀 변화 추세를 알아본다. 둘째,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한다. 셋째, 연구결과를 기초로 무자녀 현상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II. 문헌연구

기혼여성들의 무자녀 현상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이래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15-18]. 무자녀 현상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발도상국의 무자녀 현상과 선진국의 무자녀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기혼여성의 무자녀 현상은 비자발적 무자녀와 자발적 무자녀 현상이 혼재하여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모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개발도상국 무자녀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여성의 불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영양섭취 상태로 알려져 있다[5]. 로마누이크(Romanuik, 1980) 역시 영양섭취와 건강상태가 불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19]. 또한 맥폴(Macfall, 1979)은 질병과 영양부족 상태가 여성들의 불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7]. 그러나 멘켄

(Menken, 1981)과 봉가아트(Bongaarts, 1980)는 영양 섭취 상태와 불임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6][20].

비버스(Veevers, 1973)와 커트라이트· 트렌트(1982)는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를 가지기에 적합한 시기까지 기다리며 출산을 연기함으로써 영구적인 무자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4][8]. 범패스(Bumpass, 1973)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역할의 변화가 자발적 무자녀 현상을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울로위나(Woolowyna, 1977)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가톨릭교인의 대부분은 비자발적 무자녀이며 기독교인의 무자녀는 대부분 자발적 무자녀라고 밝히고 있다[21].

한편, 래리돈(Leridon, 1982)은 선진국 여성들의 불임 가운데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 2%~5%의 비자발적 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불임은 자발적 불임으로 간주한 바 있다[22]. 포스톤과 트렌트(Poston & Trent, 1982)에 따르면 비자발적 무자녀율의 감소와 자발적 무자녀율의 증가 유형은 사회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곡선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7]. 한편, 카프리연구실(2010)은 유럽대륙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무자녀율 증가 추세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무자녀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7][23].

오유진·박성준(2008)은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벡터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이라는 거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줄어들어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출산연령도 높아지며 결국에는 출산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이들의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 중단 및 포기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높은 주택비용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타 연구와 달리 높은 주택비용이 출산에 부정적이기는 하나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비용이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24].

윤경자(2010)는 부산광역시의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

하고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부산 여성인구의 현황을 통해 파악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최저의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 인구고령화 현상, 여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가장 낮은 만족도, 높은 가사 노동 부담과 책임, 불평등한 성인지적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불평등, 성별 결혼 만족도 차이,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 저하 등이 총체적으로 어울려서 전국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거부감이 가장 높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고하였다[25].

이인숙(2005)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의 결정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임을 밝혀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으며,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그리고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26].

권윤진(2004)은 아이 없는 여성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이며 또한 여성 스스로가 아이 없는 삶을 어떻게 정체화하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아이가 없음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겨진다. 이것은 아이의 의미가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 관계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맞물려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아이가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데 한국사회는 아이가 없는 여성에게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아이가 없는 여성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잘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27].

유종열(2010)은 저출산의 문제를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또한 높은 결혼 비용과 소득 및 고용 불안정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적·물질적 부담 등은 출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환 가치보다 비용 가치에 대한 부담이 커짐으로써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28].

모렌(Mollen, 2006)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연구를 통해 자발적 무자녀를 선택한 이유와 주변 반응에 대한 경험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존 사회가 부여하는 성역할에 대한 거부, 유년시절의 경험 및 부모관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유전적 질병, 사회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 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라고 하였다. 사회적 시선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지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정심이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낙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보스(Vos, 2009)와 모렐(Morell, 2005)은 결혼연기 및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자발적 무자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29][30].

김정미·양성은(2013)은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녀의 선택 동기와 주변의 반응,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대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기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이유를 개인적 가치관 요인과 원가족 경험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범주화(範疇化)하였다. 이들의 삶에 대한 주변의 반응 중 양가 부모님들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과도한 관심과 배려 혹은 무시하는 태도로 이들은 상당한 불편함과 부담감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모두의 바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 가족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었다[13]. 이민아(2013)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고, 앞으로도 자녀계획이 없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ath interview)방법

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특히 자녀 중심적인 한국 가족의 모습과 지나친 사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또한 여성 면접자자의 경우에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로 인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기술하였다[14]. 한편, 골드사이더(Goldsheider, 1971)에 의하면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출산연기를 하는 부부가 많아지며 그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무자녀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31].

김한곤(1991)은 1966에서 1985년까지 5년 간격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자녀경향에 대한 변동추이를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15-19세, 20-24세, 25-29세 등 젊은 연령층의 자발적 무자녀율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40대 연령군의 비자발적 무자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교통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10].

앞에서 살펴 본 무자녀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무자녀의 실태 및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연구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무자녀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별 무자녀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

혼 여성의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기 위하여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10][24]. 그러므로 선행연구 부분에서 다루었던 관련분야의 미시적 및 거시적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시적 연구결과를 거시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각 연도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의 출산에 관한 것과 독립변수는 1985년부터 해당연도의 한국도시연감,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29-31].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에는 출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1995년도의 무자녀율은 분석에서 빠졌으며 독립변수들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비해 5년 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2.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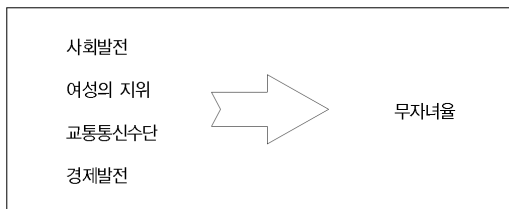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일반가설: 근대화의 정도(사회발전, 여성의 지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경제발전 등은)은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사회발전은 무자녀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성의 지위는 무자녀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무자녀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경제발전은 무자녀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일반기혼 무자녀율과 연령군별 무자녀율이며, 각각의 무자녀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혼 무자녀율

$$: \frac{15-49\text{세 무자녀기혼부인 총수}}{15-49\text{세 기혼부인 총수}} \quad (1)$$

연령군별 무자녀율

$$: \frac{\text{특정 5세 간격 연령층의 무자녀부인 총수}}{\text{특정 5세 간격 연령층의 부인 총수}} \quad (2)$$

한편, 일반기혼 무자녀율과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변수들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적합하며,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13개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보급률, 도시화율, 전문직종사자율, 비농업분야종사자율, 인구 10만 명당 의사율,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율, 도로포장률, 도로보급률,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인당 GDP(지역 내 총생산) 등 13개 변수들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가설검증을 위하여 도입한 다중회귀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로 높은 상관성을 지닌 변수들을 묶어서 크게 사회발전지수, 교통수단지수, 여성의 지위지수, 경제발전지수 등의 네 가지 요

인으로 간소화였다. 또한 이상의 네 가지 요인은 표준 점수(Z Score)를 계산하여 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회발전지수는 주택보급률, 도시화율, 전문직종사자율, 비농업분야종사자율, 인구 10만 명당 의사율,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을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수단지수는 도로포장률, 도로보급률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 지위 지수는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발전지수는 1인당 GRDP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2.3 분석 단위 및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특별시, 여섯 개의 광역시, 아홉 개의 도 등 16개의 광역 행정단위를 분석 단위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수로 묶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도입된 독립변수들이 기혼여성들의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고 자료 수집의 현실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약 5년 정도의 지연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센서스조사 항목에 출산력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에 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으므로 1995년의 무자녀율에 관한 자료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IV. 분석 결과

1. 기혼여성의 무자녀율 변화 추세

[표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전체의 기혼여성 무자녀율은 1990년 0.081에서 2005년 0.094로 상승하였다가 2010년에는 오히려 0.070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의 무자녀율의 증가는 비자발적 무자녀율의 감소와 자발적 무자녀율의 증가에 기인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오

히려 무자녀율이 감소한 것은 2005년 이후 한국 정부가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199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뒤떨어진 전라남북도의 기혼여성 무자녀율이 0.0576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대화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무자녀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기혼 여성의 무자녀율은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행정구역별 일반기혼 무자녀율: 1990~2010

구분	1990	2000	2005	2010
전국	0.081	0.084	0.094	0.070
서울	0.086	0.105	0.117	0.085
부산	0.084	0.076	0.083	0.072
대구	0.085	0.075	0.077	0.068
인천	0.097	0.080	0.093	0.072
광주	0.074	0.069	0.075	0.062
대전	0.078	0.078	0.090	0.065
울산	-	0.074	0.076	0.061
경기	0.098	0.091	0.100	0.067
강원	0.066	0.079	0.086	0.070
충북	0.064	0.074	0.083	0.067
충남	0.059	0.077	0.088	0.063
전북	0.057	0.070	0.071	0.060
전남	0.057	0.057	0.064	0.056
경북	0.071	0.072	0.087	0.067
경남	0.083	0.073	0.085	0.064
제주	0.068	0.076	0.094	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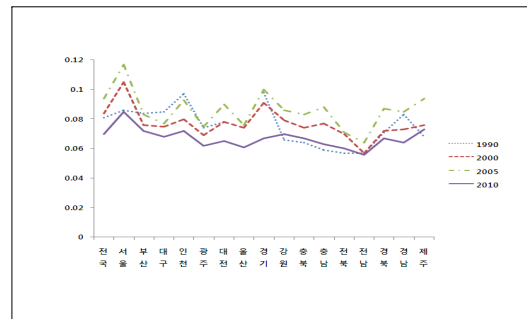


그림 2. 행정구역별 일반기혼 무자녀율: 1990~2010

연령군별 무자녀율 변화 추세는 [표 2]와 [그림 3]과 같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의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0.667에서 0.521로 감소하였으며 20~2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25세~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0.151에서 0.329로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30~34세, 35세~39세, 40~4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40대 연령군의 무자녀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20대 후반 연령군부터 40대 중반 연령군까지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자발적 무자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 연령군의 무자녀율이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비자발적 무자녀율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 1990~2010

구분	15~19		20~24		25~29		30~34	
	\bar{X}	S	\bar{X}	S	\bar{X}	S	\bar{X}	S
1990	0.667	0.142	0.416	0.060	0.151	0.023	0.039	0.005
2000	0.522	0.113	0.439	0.055	0.223	0.043	0.062	0.014
2005	0.497	0.133	0.465	0.040	0.329	0.052	0.103	0.025
2010	0.521	0.229	0.416	0.049	0.271	0.037	0.107	0.021
구분	35~39		40~44		45~49		전체	
	\bar{X}	S	\bar{X}	S	\bar{X}	S	\bar{X}	S
1990	0.021	0.005	0.015	0.003	0.014	0.003	0.075	0.014
2000	0.034	0.006	0.028	0.005	0.023	0.005	0.077	0.010
2005	0.045	0.010	0.034	0.007	0.032	0.007	0.085	0.012
2010	0.042	0.008	0.028	0.006	0.026	0.004	0.067	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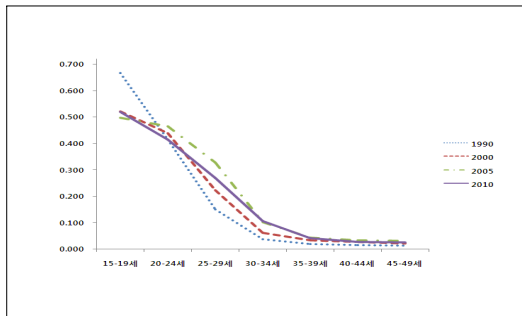


그림 3.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 1990~2010

한편, [그림 4]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까지 20년간의 각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 후반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조금씩 낮아졌으며 20대 초반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대체로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정부가 난임 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연령군별 무자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무자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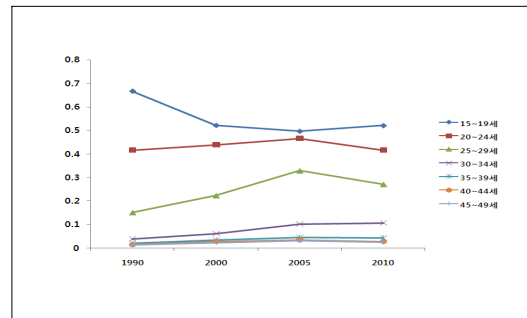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 1990~2010

2. 독립변수와 무자녀율과의 상관관계분석

[표 3]은 1990, 2000, 2005, 2010년 각 연도별 독립변수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의 단순상관관계분석 결과와 네 개 연도별 자료를 묶어서 분석한 단순상관관계분석 결과이다. [표 3]의 단순상관관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급율은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그리고 45~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20~24세, 25~29세, 30~34세, 그리고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직종사자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부적 관계가 있으며, 25~29세 30~34세 그리고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종사자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비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며 25세에서 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며 나머지 모든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포장율은 20~24세 그리고 25~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 나머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보급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며 20~24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며 25세 이상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대학 이상 교육율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나 나머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39세, 40~44세 그리고 45~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RDP는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그리고 45~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간의 관계의 정도를 보여 줄 뿐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도입하였다.

단순상관계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5 이상의 높은 관계가 많을 뿐 아니라 독립변수 수가 많기 때문에 13개의 독립변수 모두를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도입한다고 가정 했을 때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어서 지수를 만들어 무자녀율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3. 독립변수와 연령군별 무자녀율 간의 상관관계: 1990~2010

1990	A	B	C	D	E	F	G
15~19	.252	.119	.074	.261	.365	.384	.323
20~24	-.335	.668**	.464	.829**	.609	.690**	.529
25~29	-.635	.829**	.675**	.916**	.795**	.860**	.398
30~34	-.514	.551	.171	.576	.328	.420	-.117
35~39	-.506	.595	.119	.588	.200	.336	-.096
40~44	-.566	.415	.041	.429	.092	.228	-.294
45~49	-.244	.324	-.123	.494	.125	.260	.060
GMR	-.623	.689	.366	.831	.387	.511	.448
1990	H	I	J	K	L	M	
15~19	-.461	.263	.413	-.342	-.327	.061	
20~24	-.365	.631	.645	-.534	-.769	.552	
25~29	-.108	.860**	.810**	-.529	-.686	.461	
30~34	.127	.403	.406	-.112	-.492	.367	
35~39	.241	.343	.461	-.141	-.496	.417	
40~44	.254	.233	.278	-.012	-.371	.297	
45~49	-.242	.164	.312	-.311	-.687	.447	
GMR	-.201	.512	.496	-.451	-.820	.710	
2000	A	B	C	D	E	F	G
15~19	.456	-.084	-.088	.123	.112	-.094	.030
20~24	.116	.573	.433	.756**	.422	.582	.269
35~29	-.117	.657	.679	.764**	.579	.771**	.459
30~34	-.229	.488	.590	.570	.441	.626**	.404
35~39	-.460	.186	.239	.144	.085	.305	.174
40~44	-.123	.078	.047	.235	-.113	.055	-.096
45~49	-.488	.197	-.017	.240	-.256	.029	-.015
GMR	-.282	.420	.570	.561	.331	.524	.262
2000	H	I	J	K	L	M	
15~19	-.676	-.055	.095	-.407	-.351	.105	
20~24	-.161	.522	.756**	-.564	-.626**	.180	
35~29	.235	.747	.818**	-.347	-.376	-.025	
30~34	.459	.619	.605	-.106	-.168	-.084	
35~39	.710**	.303	.265	.355	.249	-.157	
40~44	.190	.028	.167	-.169	-.384	.261	
45~49	.447	.037	.162	.117	-.135	.078	
GMR	.419	.557	.566	-.180	-.273	.043	
2005	A	B	C	D	E	F	G
15~19	.255	-.642**	-.753**	-.627**	-.709**	-.683**	-.679**
20~24	-.288	-.236	-.225	-.070	-.317	-.145	-.224
25~29	-.643	.726**	.665**	.776**	.517	.707**	.694**
30~34	-.698**	.605	.703**	.688**	.645**	.752**	.604
35~39	-.678**	.217	.133	.174	.104	.185	.054
40~44	-.566	-.086	-.116	-.054	-.142	-.021	-.268
45~49	-.542	.011	-.052	.109	-.230	-.097	-.200
GMR	-.729	.330	.429	.422	.273	.415	.267

2005	H	I	J	K	L	M	
15~19	-.249	-.766**	-.672**	.206	.054	.311	
20~24	.135	-.135	-.059	.201	-.042	.337	
25~29	.225	.797**	.854**	-.066	-.151	-.087	
30~34	.335	.771**	.763**	-.111	-.142	-.154	
35~39	.511*	.268	.281	.400	.286	-.155	
40~44	.511*	-.005	.035	.377	.253	-.083	
45~49	.249	.017	.070	.197	.044	-.103	
GMC	.418	.520	.489	.157	.020	-.078	
2010	A	B	C	D	E	F	G
15~19	-.097	.054	-.311	-.270	-.248	-.169	-.150
20~24	-.364	.180	.037	.208	.162	.071	.142
25~29	-.494	.791**	.731**	.752**	.692**	.681**	.773**
30~34	-.601	.676**	.689**	.641**	.797**	.728**	.651**
35~39	-.663**	.586**	.500	.528	.602	.493	.479
40~44	-.475	.040	-.037	-.010	.011	-.057	-.126
45~49	-.129	-.241	-.447	-.251	-.492	-.390	-.403
GMC	-.738	.487	.499	.462	.507	.468	.396
2010	H	I	J	K	L	M	
15~19	.368	-.196	-.064	.490	.398	.047	
20~24	.009	.057	.164	-.121	-.091	-.100	
25~29	.276	.817**	.834**	-.097	-.039	-.194	
30~34	.341	.769**	.772**	-.101	.050	-.387	
35~39	.394	.587**	.618**	.010	.147	-.368	
40~44	.379	.038	.030	.241	.322	-.253	
45~49	.173	-.365	-.263	.300	.178	.164	
GMC	.494	.598	.577	.163	.197	-.281	
1990~2010	A	B	C	D	E	F	G
15~19	.175	-.156	-.269	-.185	-.352**	-.369**	-.117
20~24	-.160	.378**	-.018	.504**	.197	.258	.120
25~29	-.514**	.497**	.450**	.573**	.725**	.831**	.300
30~34	-.677**	.415**	.660**	.503**	.818**	.876**	.290
35~39	-.635**	.365**	.423**	.413**	.654**	.751**	.090
40~44	-.467**	.196	.145	.290	.431**	.568**	-.163
45~49	-.426**	.193	.135	.310	.384**	.567**	-.124
GMC	-.242	.414**	-.091	.464**	.101	.163	.220
1990~2010	H	I	J	K	L	M	
15~19	-.334**	-.406**	-.345**	-.067	-.101	-.177	
20~24	.132	.205	.290	-.202	-.362**	.098	
25~29	.734**	.830**	.850**	.104	.054	.493**	
30~34	.789**	.884**	.867**	.149	.153	.540**	
35~39	.824**	.750**	.781**	.323**	.255**	.461**	
40~44	.733**	.544**	.623**	.278	.158	.407**	
45~49	.711**	.542**	.635**	.260	.110	.493**	
GMC	.162	.168	.161	-.056	-.250	-.133	

** p<.01, * p<.05

- A: 주택보급률
- B: 도시화율
- C: 전문직종사자율
- D: 비농업분야종사자율
- E: 인구10만명당의료사율
- F: 인구10만명당의료기관율
- G: 도로포장률
- H: 도로보급률
- I: 여성의대학이상교육률
- J: 남성에대한여성의대학이상교육률
- K: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L: 남성에대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M: 1인당 GRDP(천원)

13개의 독립변수들을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어서 만든 지수는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지수 그리고 경제발전 등 네 가지이며 이들을 도입하여 무자녀율과 단순상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지수 가운데 세 가지 지수와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발전이 진행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지수 및 경제발전 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근대화 관련 지수와 25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상관관계가 40대 연령군별 무자녀율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네 가지 근대화 지수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연령층의 자발적 무자녀율과의 관계가 40대의 자발적 무자녀율 보다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경제발전의 발달과 일반기혼 무자녀율, 연령군별 무자녀율 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수	경제발전
15~19	-.301*	-.328**	-.323**	-.177
20~24	.297*	.181	-.019	.098
25~29	.663**	.752**	.649**	.493**
30~34	.671**	.786**	.723**	.540**
35~39	.508**	.671**	.740**	.461**
40~44	.300*	.427**	.563**	.407**
45~49	.300*	.438**	.544**	.493**
GMC	.204	.273*	.012	-.133

** p<.01, * p<.05

3. 가설검증

연구모형에서 도입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근대화지수는 15~19세 및 20~2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근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15~24세)의 무

자녀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발전지수, 교통수단, 경제발전 등은 25~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교통수단이 가장 큰 영향($\beta=0.35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경제발전 등 네 가지 지수 모두 30~3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가운데 교통수단($\beta=0.327$)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40~4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의 지위가 높을수록 25세에서 44세 연령군의 기혼여성들의 자발적 무자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beta=0.359$)와 경제발전($\beta=0.320$) 등 두 가지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혼여성들의 자발적 무자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그리고 45~49세 연령군별 기혼여성무자녀율은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른 자발적 무자녀율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입한 네 가지 지수는 30~34세 연령군의 무자녀율 설명을 가장 높게(73.0%)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5~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 64.0% 그리고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 5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 불임 여성들의 2%~5% 정도가 비자발적이며 나머지 불임은 자발적 불임이라는 래리돈(1982)의 주장과 본 연구 결과는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22]. 포스톤과 트렌트(1982)는 사회경제발전이 지속되면 비자발적 무자녀율은 감소하고 자발적 무

자녀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한국 사회가 1990년부터 2010까지 20년에 걸쳐 경험한 무자녀 현상은 이들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7].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지면 출산중단과 출산포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오유진과 박성준(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24]. 교환이론 관점에서 무자녀 현상을 설명한 유종열(2010)의 연구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는 김정미·양성은(2013)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13][28]. 한편, 김한곤(1991)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5~29세까지의 젊은 연령층의 자발적 무자녀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40대 연령군의 비자발적 무자녀율이 감소하는 것은 교통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0].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경제발전의 발달과 일반기혼 무자녀율, 연령군별 무자녀율 간의 회귀분석

구분	15~19		20~24	
	B	β	B	β
(상수)	.562**		.429**	
사회발전	-.044	-.167	.024	.288
교통수단	-.013	-.055	.011	.144
여성의 지위	-.048	-.205	-.020	-.273
경제발전	-2.744E-07	-.016	3.562E-07	.066
F값	2.310		2.041	
수정된 R2	.078		.063	
구분	25~29		30~34	
	B	β	B	β
(상수)	.217**		.064**	
사회발전	.030*	.254	.012*	.232
교통수단	.037*	.352	.015*	.327
여성의 지위	.021	.205	.014**	.296
경제발전	1.488E-06	.198	7.430E-07**	.223
F값	28.554*		42.860*	
수정된 R2	.640		.730	
구분	35~39		40~44	
	B	β	B	β
(상수)	.032**		.023**	
사회발전	.002	.116	.000	.034
교통수단	.003	.175	-9.442E-06	-.001
여성의 지위	.008**	.503	.005**	.465
경제발전	1.710E-07	.149	1.687E-07	.200
F값	23.366*		7.915*	
수정된 R2	.591		.309	

구분	45~49		GMCR	
	B	β	B	β
(상수)	.019**		.080**	
사회발전	.000	-.022	.000	-.011
교통수단	.001	.085	.010*	.572
여성의 지위	.004*	.359	-.005	-.307
경제발전	2.612E-07	.320	-2.526E-07	-.203
F값	9.024**		3.125*	
수정된 R2	.341		.121	

** p<.01, * p<.05

한편, 네 가지 근대화 지수가 일반기혼 무자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통수단만이 일반기혼 무자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beta=0.572$)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도입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15~19세 및 20~2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지위, 그리고 경제발전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5~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여성의 지위를 제외한 사회발전, 교통수단, 그리고 경제발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근대화 관련 네 가지 지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여성의 지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40~4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여성의 지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그리고 45~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여성의지위 및 경제발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변동과 더불어 각 연령군별로 자발적 무자녀와 비자발적 무자녀를 상이하게 경험하고 있으므로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기혼여성 무자녀율을 종속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연령군별 무자녀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는말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일반기혼여성의 무자녀율 변화 추세를 보면 1990년에서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0년에는 오히려 미미하지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일반기혼여성의 무자녀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호남지역의 무자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무자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자녀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의 자발적 무자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화 추세를 보면 15~1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조금 감소하였으며 20~24세 연령군 무자녀율은 변화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25세~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은 약 2배 이상 높아졌으며 30~34세, 35세~39세, 40~4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45~49세 연령군의 무자녀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 중반 이후부터 40대 초반까지의 무자녀율의 증가는 자발적 무자녀율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2005년 이후 난임 부부들의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난임 부부 지원정책 사업이 결과로 1년에 약 4,000명 내외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12]. 그러므로 각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증가는 자발적 무자녀율의 증가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발전, 여성의 지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경제발전 지수와 각 연령군별 무자녀율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15~19세 및 20~2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20대 초반까지 기혼여성의 무자녀율과 근대화 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발전지수, 교통수단, 경

제발전 등은 25~2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경제발전 등 네 가지 지수 모두 30~3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5~3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과 40~44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만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의 지위가 높을수록 25세에서 44세 연령군의 기혼 여성들의 자발적 무자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49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와 경제발전 등 두 가지 지수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혼여성들의 자발적 무자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5~29세, 30~34세, 35~39세, 그리고 40~44세 연령군별 기혼여성무자녀율은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른 자발적 무자녀율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이래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지원정책의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의 임신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32]. 둘째, 연령군별로 자발적 및 비자발적 무자녀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기혼 여성 연령층의 자발적 무자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출산과 양육에 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물론 출산에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인식 전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30][33].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광역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자료이므로 자발적 무자녀와 비자발적 무자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여 자발적 무자녀 현상과 비자발적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무자녀율의 지역적 차이 및 시간적 변화 추세를 살펴 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무자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석,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제30권, 제2호, pp.97-115, 2007.
- [2]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3호, pp.52-64, 2012.
- [3] 전병주, “저출산 시대와 모성의 건강증진”,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4권, 제6호, pp.162-173.
- [4] J. E. Veevers, “Voluntary Childless Wives: an Exploratory Stud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57, pp.357-366, 1973.
- [5] R. E. Frisch, “Demographic Implication of the Biological Determinants of Female Fecundity,” *Social Biology*, Vol.22, pp.17-22, 1975.
- [6] Menken, Jane, James Trussell and Susan Watkins, “The Nutrition Fertility Link: An Evaluation of the Evidenc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11, pp.425-441, 1981.
- [7] Dudley L. Jr. Poston and Katherine Trent, “International Variability in Childlessness :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December), 1982.
- [8] K. Trent, *A Cross-National Examination of the Prevalence and Determination of Childlessness among Ever-married Women*, M.A. thesis,

- University of Texas-Austin, 1982.
- [9] L. B. Perkinson, *Patterns of Marital Childlessness in the States and Metropolitan Areas of the United States: A Descriptive and Analytic Study*, University of Texas-Austin, unpublished thesis, 1983.
- [10] 김한곤, “한국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동 추이와 그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5권, 제1호, pp.33-51, 1991.
- [11] 황나미, 장인순,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사업대상 의 임신 성공 특성 분석”, 한국간호학회 학술대 회, pp.264-264, 2012.
- [12] <http://www.mw.go.kr>
- [13] 김정미, 양성은,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 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제31권, 제5호, pp.79-95, 2013.
- [14] 이민아,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 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할”,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pp.143-176, 2013.
- [15] L. L. Bumpass, “Is Low Fertility Here to Stay?,”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5, pp.67-79, 1973.
- [16] L. Freshnock and P. Cutright, “Structural Determinants of Childlessness: a Nonrecursive Analysis of 1970 U.S. Rates,” *Social Biology*, Vol.25(Fall), pp.69-178, 1978.
- [17] J. A. Jr. Mcfalls, “Frustrated fertility: a Population Paradox,” *Population Bulletin*, Vol.34, May, 1979.
- [18] Gavin W. Jones,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33, No.3, pp.453-478, 2007.
- [19] Romaniuk. Anatole, “Increase in Natural Fertility During the Early stages of Monernization : Evidence from an African Case Study, Zaire,” *Population Studies*, Vol.34, pp.293-310, 1980.
- [20] J. Bongaarts, “Does Malnutrition Affect Fecundability? A Summany of Evidence,” *Science*, Vol.208, pp.564-569, 1980.
- [21] J. E. Wolowyna, “Income and Childlessness in Canada: a Further Examination,” *Social Biology*, Vol.24, pp.326-331, 1977.
- [22] H. Leridon, “Sterilite, Hypofertilite et Infecondite en France(Infertility in France),” *Population*, Vol.37, No.4-5, pp.807-836, 1982.
- [23] The ESHRE Capri Workshop Group, “Europe the continent with the lowest fertility,” *Human Reproduction Update*, Vol.16, No.6, pp.590-602, 2010.
- [24] 오유진, 박성준,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 경제학보, 제15권, 제1호, pp.93-112, 2008.
- [25] 윤경자,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 인구학, 제33권, 제2호, pp.137-163, 2010.
- [26] 이인숙,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 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67-90, 2005.
- [27] 권유진, *삶의 기획 과정으로서의 ‘아이없음 (childlessness)’에 관한 연구: 아이없는 기혼여성 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 [28] 유종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이론적 접근: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9 권, 제4호, pp.33-47, 2010.
- [29] D. Mollen, “Voluntarily Childfree Women: Experiences and Counseling Considera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28, No.3, pp.269-284, 2006.
- [30] Allison E. Vos, “Falling fertility rates: new challenges to the European welfare state,” *Socio-Economic Review*, Vol.7, No.3, pp.485-503, 2009.
- [31] C. Goldscheider, *Population, Modernization and Social Structure*, Boston : Little Brown,

1971.

- [32] 보건복지부, 2011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 2012.
- [33] 이삼식,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7호, pp.41-52.
- [34]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자료, 1990, 2000, 2005, 2010.
- [35]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1991, 2001, 2006, 2011.
- [3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1, 2001, 2006, 2011.

저 자 소 개

김 한 곤(Han-Gon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2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85년 12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14년 1월 ~ 현재 : 한국인구학회장
 - 2014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장
- <관심분야> : 저출산, 인구고령화, 다문화, 보건사회 분야